



한·미 FTA타결이 축산·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

◆ 타결내용과 영향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상 늘 Vision을 갖고 살아왔다.

면적으로 보면 세계 19위, 인구로 보면 26위이지만 경제규모로 보면 12위에 있다. 앞으로 G7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속에서 DDA나 FTA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언제 어떻게 어느나라와 그와같은 협상을 체결할것이냐는 정책판단의 문제이다. 농업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어려운 상대이고 다음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미국과의 FTA타결후 잘 대응하여 체질이 강화되면 우리의 목표 G7에 들어갈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는 우리민족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FTA중 축산분야의 경우만 들어 그 내용과 영향, 그리고 대응전략의 골격을 몇가지 언급하고자한다. 이번 협상은 농업부분에서는 최소한으로 내어주고 타분야에서는 얻어내어 전체적으로 득을 보자는 협상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농민들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쇠고기의 경우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은 현행 관세가 40%인데 균등배분하여 매년2.7%씩

떨어져 15년후에는 관세를 철폐하되 미국산 쇠고기가 연간 270천톤 이상수입되면 타결후 5년까지는 초과 물량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6천톤씩 증량하여 그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타결후 10까지는 30%, 15년까지는 2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육우와 식용설육(족, 꼬리), 쇠고기 가공품은 15년간 균분배분하여 식용설은 현행 18%에서 매년 1.2%씩, 쇠고기 가공제품은 현행 72%에서 매년 4.8%씩 감축하게 되어있다. 다만 이경우는 세이프가드(SG)조항이 없다.

당장은 쇠고기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으나 사육농기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미 송아지 가격과 큰소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국회 비준이 끝나면 그 가격하락이 더 크게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빠있는 미국산 쇠고기 즉, 갈비가 수입되기 시작하면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국내산 쇠고기 하급품과 육우와 돼지고기 소비도 잠식하게 되어 소사육에 대한 장래의 불안 심리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EU등 유럽국기들과 FTA협상이 본격화되면 사육의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FTA를 어떻게 체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노 경 상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한우농가는 사육을 포기 할 것이냐, 규모를 확대 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단순 계산하여 수입육 가격이 현행 관세수준인 40%로 떨어지게 되면 한우가격은 40%이상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계 농가는 탈락하고 규모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과연 한계농가의 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 두당 순이익이 어느정도 하락할 것이며, 현재 수준의 농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계량적 분석과 경험적 판단을 통해서 추정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쇠고기 생산비 하향수준, 고급화 수준, 수입육과의 차별화정도, 갈비, 안심, 등심등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의 소비형태의 변화, 도축장 및 가공공장, 정육점등 소매점, 음식점, 단체급식처등의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여하에 따라 농가소득 수준은 결정될 것이다.

다음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의 삼겹살은 현행 관세가 22.5%인데 10년간 균등배분되어 철폐되고 그기간 동안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데 첫해에 825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복리로 6%증량되어 10년차에는 13,938톤이상되면 관세가 부가된다. 세이프가드 발동세율은 1~5년차에는 현행세율의 100%인 22.5%가 부과되며 6~10년차에는 현행세율의 70~50%가 부과된

다. 2006년 수입물량이 7,500톤을 감안하면 첫해에 8,250톤이상 수입될 경우 관세 22.5%가 부과 될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은 22.5%의 관세, 식용설육은 18%~30%, 냉장육은 25%, 가공품은 27~30%의 관세가 2014년에는 철폐되고 소시지 18%는 5년에 걸쳐 철폐되도록 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으나 위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가 상당히 줄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삼겹살 때문에 국내산 삼겹살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보이고 소시지등 가공제품의 국내산 경쟁력 하락으로 육가공 제품의 원료육은 수입육으로 크게 대체 될 것으로 보인다. 육가공산업은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그 영향이 양돈농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경우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 열병청정화로 대일수출 가능여부, 시설개선과 사양관리의 향상, 비선호부위 소비촉진등에 따라 한계농가의 탈락과 규모화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미 양돈장 패각을 원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쌀 다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양돈산업이 살아남으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닭고기의 경우 현행 관세가 18~20%인 미절단 통닭, 20%인 냉동 가슴살, 날개는 12년후 관세가 철폐되고 18%인 냉장육, 20%인 냉동 닭다리, 기타절단육, 30%인 가공품은 10년후에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있다. 닭고기의 경우는 SG가 없고 살아있는 닭·오리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하게 된다.

냉동닭다리가 제일 많이 수입되는데 외식?가공산업쪽에서 수요가 증대될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대세계 수출액중 우리나라의 점유 비율이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세철폐후 한국수출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양계산업에 영향이 상당히 클것으로 추정된다. 12년후에 관세가 철폐될 난황도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는 편인데 이것은 주로 제과,제빵에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식품 소비가 급증하지 않는 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제품의 경우는 현행관세 176%인 전지분유, 탈지분유와 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TRQ5,000톤부터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하게 되어있다. 현행관세를 유지한 다는것은 좋아보이나 무관세 TRQ5,000톤 때문에 2006년에 수입된 물량이 5,000톤미만이기 에 관세철폐나 마찬가지다. 특히 현행 36%인 혼합분유가 10년후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탈지분유 시장을 교환시킬 가능성이 크다.

치즈는 현행 관세가 36%인데 15년후에 철폐되도록 되었고 무관세 TRQ7,000톤부터 시작하여 매년 3%씩 증량하게 되어있다. 지난해 6,900톤정도 수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수입 수준에서 관세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피자소비의 급등으로 치즈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국내 치즈생산은 큰 타격을 받을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정부가 수출보조금까지 주면서 치즈를 수출하고 있는점은 우리가 관심을 뒤야 할 것이다. 시유소비의 감소, 가공산업의 낮은 경쟁력, 수입유가공제품의 증가, 도시화로 인한 목장이전의 물가피성등으로 낙농인의 숫자가 줄고 사육두수도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낙농산업이 한·미FTA로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료의 경우 2%의 할당과세로 들어오고 있는 근채류 즉 조사료는 15년후에 관세가 철폐되고 무관세 TRQ20만톤을 매년 수입하게 되어있다. 미국으로부터 2006년에 57만톤 수입된 것을 고려하면 1/3정도가 앞으로 무관세로 들어오게되어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총채보리 생산에는 악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물, 광물질등 보조사료는 5%의 할당관세를 물고 있는데 12년후에 철폐되고 첫해에 5,500톤의 무관세 TRQ물량이 들어오고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하게 되어있다. 이것도 사료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에 미국으로부터 2,459톤 수입된 것을 고려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된것이나 다름없다. 사료용 옥수수는 현재 0%이기에 즉시 철폐해도 변함이 없고 채유및박용으로 들어오는 대두도 즉시 철폐되어 사료 생산비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료산업에 미치는 한·미 FTA 영향은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응방안

이번 한·미 FTA는 농업분야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자동차, 섬유등의 산업에 이익을 가져오



는 협상이었으며 농업분야중 피해의 2/3이상이 축산분야에 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피해 보상 및 경쟁력제고 대책은 축산중심으로 추진 될 수밖에 없다. 축산분야 뿐만아니라 농업전체의 대책은 먼저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국농민과 경쟁할 수 있는 농민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할 수 없는 품목과 농업인은 사회보장정책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경쟁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은 한·미FTA 전과후가 확실히 다른 정책이 나와야하고 농업의 모습도 확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정책 일부를 수정하고 과거와 같은 사고로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마음은 버려야 할 것이다. 대규모의 미국 농업인과 맨몸으로 어떻게 부딪칠 것인가?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하여 죽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냥 놔두면 도저히 경쟁할 수가 없다. 이익을 얻게될 산업으로부터의 협력과 소비자 국민 모두로부터의 지지, 확고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비장한 각오로 농사를 하고 축산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경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축산인이다. 축산인이 경쟁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축사, 값싼 사료가 공급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쟁 가능성있는 축산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영능력을 어떻게 제고해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하고 우선 먼저 축산인 스스로 경쟁력 제고의 각오와 노력없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축산업을 단순한 1차산업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련산업과 함께 Agri business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즉 후방산업인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와 전방산업인 도축, 가공, 유통산업을 포괄적인 구조조정과 대응전략이 수립, 집행되어야한다. 양축가가 쇠퇴하면 전후방산업 모두가 같은 상황을 맞게 된다.

농림부의 대응방안을 보면 농민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농민대책만 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니다.

사료산업이 잘못되면 양축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도축장, 유가공, 육가공이 쏠어지면 양축가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1차 산업인 축산업과 그 전후방 산업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 되어야한다. 따라서 관련 산업 경영자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전폭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이 경우 타 산업과의 연관분석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양축가, 세계적인 도축시설과 브랜드 파워를 갖고있는 회사들이 우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우리 양축가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계열주체 회사, 영농조합법인등을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식의 계열화가 필요하다. 위와같은 경영체가 사료회사와 제후, 도축, 가공,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아야한다.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축산물이 선택되도록 확실한 차별화를 해야한다. 미국식품질과 미국식 소비자선호도가 우리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개발하여 우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다. 품질과 가격만이 소비자를 잡을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제품의 이미지, 소비자의 소비형태 즉 식습관등의 요소도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1차 산업인 축산업내에서는 전 양축가가 공동 대처해야한다. 소 농가는 한우만, 젖소농가는 그들만, 양돈농가는 양돈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다른 축종은 죽더라도 우리만이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양축가가 함께 스스로 해쳐나가야한다.

축종별로 보면 한우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이후 떨어진 1등급 비율을 높여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 높은 쇠고기 가격하향조정을위해 송이지 가격하락을 위한 번식우사업, 바이오 에너지 개발로 인한 옥수수, 대두등의 사료원료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대비한 사료 가격안정화, 안전성과 투명성확보 및 수입육과 차별화를 위한 생산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도축장통폐합과 엄격한 HACCP적용, 비선호부위의 소비를 위한 새로운 제품개발등이 필요하다.

돼지의 경우 폐사율의 주원인 소모성질병근절, 대일수출 길을 막고 있는 열병청정화, 환경의 주범으로 오해받고있는 돈분의 자원화, 쇠고기의 경우와 같이 비선호 부위 제품개발, 돈사시설의 현대화, 수입돈육과의 차별화를 위한 생산이력제, 도축장과 가공공장 활성화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닭의 경우 계열업체 중심으로 농장HACCP도입, 위생적인 운반차량, 포장의무화, 종계유통개선, 시설현대화등이 요망된다.

낙농의 경우 먼저 수급관리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현하여 전국단위 쿼타제, 시장변화에 적응하는 가격제도등을 추진하고 무관세 TRO물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하고, 개량핵심역할을 할 육종농가제도도입, 로봇착유기등 자동

화시설, 총체보리 생산확대, 총체벼생산등을 위한 간척지 활용, 치즈등 유제품생산을 위한 유가공산업지원, 농장형 가공제품개발등의 대책이 요망된다.

사료산업의 경우 먼저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따른 옥수수, 대두등의 가격인상에 대비한 안정적 장기 원료 확보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곡물메이저의 통제밖에서 농림부?외교통상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조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할 것이다. 옥수수, 대두등의 관세 철폐로 원료비용이 절감되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종별 전용사료공장건설, 생산비 절감을 위한 On line판매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할당관세 범위확대 및 의제매입세 상향조정, 원료구매에 대한 사료협회와 농협간의 공동노력, 야자박등 부산물을 원료로하는 다양한 원료사료 개발, 양축가 지도방법의개선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제도개선과 자금지원으로 미국사료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대응방안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FTA 특별지원법에 반영되어야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법적 뒷받침이 없는 불가능하다. 한·미 FTA 대응은 축산인과 그 전후방 산업종사자와 정부가 합심하여 극복해야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사료업계는 타산업과는 달리 생산비 점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좋은 기회로 받아드려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업계는 지금까지 단순히 사료를 양축가에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양관리기술의 향상과 방역 활동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또한 최



근에는 축산브랜드 개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사료업계가 한·미 FTA와 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축산업의 향방이 가름된다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수준높은 인력과 잘 관리된 조직, 국제화된 경영수준, 어느나라 못지 않는 사료효율을 제고 시키고있는 사료업계의 움직임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